

행정학개론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김종욱 교수(에듀윌)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1. 정답 ①

해설 ② 신행정론 - 형평성을 추구한다. 탈규제는 신행정론을 비판하는 신공공관리론의 가치이다.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 그리고 민주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 그리고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성을 추구한다.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 ·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2. 정답 ④

해설 ④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급과 같은 유인구조의 설계를 강조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3. 정답 ④

해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의 가정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받는다. 현실의 사회구성원들은 이타적일 수 있으며, 경제적 선택 이외에 인간의 가치 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4. 정답 ③

해설 ③ 영기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두 합리주의(총체주의)에 입각한 예산제도이나, 계획예산제도는 집권적이고 하향식의 결정흐름이 이루어지나, 영기준예산제도는 계선관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분권적이고 상향식의 결정흐름이 이루어진다.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5. 정답 ②

해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Top-down 제도이다.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는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기재부장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정부 상위 수준에서 결정된다.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6. 정답 ④

해설 ④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정부재정의 3대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기능이다. ①은 자원배분기능, ②는 소득재분배기능, ③은 경제안정기능을 설명한다. ④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7.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제처-국무총리 ② 국가정보원-대통령
- ③ 소방청-행정안전부장관 ④ 특허청-기획재정부장관

7. 정답 ④

해설 ④ 특허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이다.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 ② 이익집단정치-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③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 ④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8. 정답 ②

해설 ②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낙태규제, 음란물규제 등과 더불어 대중정치의 사례에 해당된다. 방송에서의 음란물, 낙태 규제여부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넓게 분산된 찬성과 반대세력이 존재한다.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 ㄴ. 지방공기업평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 ㄷ.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ㄹ

9. 정답 ①

해설 ①의 ㄱ, ㄷ만 올바른 서술이다. ㄴ. 지방공기업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듯이, 지방재정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ㄹ.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되었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다.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0. 정답 ①

해설 ①만 올바른 내용이다. 버먼은 성공적 집행이란 미시적 집행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의 특성(SOP) 간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정책결정이 구체적인 정부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④ '채택'은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Berman의 미시적 집행과 거시적 집행

- 1. 거시적 집행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집행조직에 이르는 정책분야의 전 참여자와 활동을 포

합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보는 것으로, 4가지의 통로를 거친다(정책결정 ➡ 정부 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과). 여기서, ① 행정 : 정책결정 ➡ 정부program으로 전환, ② 채택 : 정부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로 받아들여지는 것, ③ 미시적 집행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으로 변화, ④ 기술적 타당성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으로 산출

2. 미시적 집행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를 지방정부의 하위수준(일선집행기관)에서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전달자 집행국면에서 다음 4가지의 '적응'이 발생한다.

① project나 집행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 어느 것에도 적응이 발생하지 않는 불집행
 ② 집행조직이 개발해 놓은 기존의 SOP에 project가 적응하는 흡수(co-optation)
 ③ 집행조직의 SOP가 채택된 project에 맞게 변하는 기술적 학습(하향식 집행론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집행유형)
 ④ project와 집행조직의 SOP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

□ Berman은 '상호적응'이 가장 성공적인 집행유형이라고 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적 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11. 정답 ③

해설 ③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교부세 유사제도이다.

1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12. 정답 ④

해설 ④ 강임은 징계의 유형이 아니다. 강등이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강임은 징계로 이루어지는 '강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

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13.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3. 정답 ④

해설 ④ 주민감사청구권의 정족수는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이다(** 5-3-2로 암기).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14. 정답 ②

해설 ② 올바른 내용이다. 표준운영절차(SOP)는 조직이 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나 규칙으로, 과업수행규칙, 기록과 보고, 정보처리규칙, 계획과 기획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이러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의 공평성을 확보한다. ① 표준운영절차는 업무 담당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며,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상대적으로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어렵고,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2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15. 정답 ①

해설 ①만 올바른 내용이다.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의 관청형성 전략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과 같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하며,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이 아니라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으며, ④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속하는 이론인가?

(1) Niskanen의 관료제 분석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행위(모든 국가기관을 계층제적 계선관료제로 간주, 기관 내 모든 관료들의 행동을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여)로만 관료제를 분석하여 ‘예산극대화의 결론’을 도출 →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측면(관료의 지위나 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 못하는 한계

(2)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그들의 선택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구조적 상황(관료의 지위나 기관의 성격)’을 강조하여, 예산극대화 모형에서와 달리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① 관료제 내에 집합행동의 문제가 존재하며, ② 예산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유형과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몹시 다르며, ③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이다.

① 관료제 내에서의 집합행동의 문제 : 예산극대화 전략은 관료들의 개인적인 전략이라기 보다는 집단적인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극대화와 관련하여 개별 관료는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② 예산의 유형에 따른 예산극대화의 변이 : 중·하위직 관료는 봉급 등 기관자체의 운영비와 같은 ‘핵심예산’의 증대에 관심을 지니나, 고위직 관료는 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인 ‘관청예산’에 더 큰 관심을 지니며 또한 다른 정부관청으로 이전되는 자금인 ‘사업예산’의 증대는 고위관료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③ 기관이 유형에 따른 예산극대화의 변이 : 합리적인 관료가 자신의 핵심예산 및 관청예산 부분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예산극대화의 동기는 핵심·관청·사업예산 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전달기관’에서 가장 크고, ‘통제기관’에서 예산극대화의 동기는 가장 약하다. ㉠ 전달기관은 산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시민·기업에게 서비스를 직

접 전달하는 등 자체 고용인력을 사용하는 정책집행을 직접 담당하므로, 핵심예산이 사업 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며 사업예산이 증가하면 핵심 및 관청예산도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㉔ 통제기관은 교부금 및 정부간 이전의 형태로 다른 공공부문 기관에 자금을 전달한 다음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증가할수록 하위기관의 성과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더 증가할 뿐 관료들(특히 고위관료)에게는 별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예산극대화의 동기를 찾기 힘들다.

㉕ 관청형성 전략 :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과 같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 →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동료적(collegial)성격을 지닌 부서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여, 그들의 부서를 참모기능에 근접하고 중앙에 위치해 있는 기관의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관청형성전략(1 민영화나 분봉-hiving off- 등을 통해,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준정부기관 등에 넘김)’을 통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도모

㉖ 예산극대화 전략에 따를 때에는 대규모 계선관료제의 팽창을 통한 국가기구의 성장이 이루어지나, 관청형성전략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위직 관리들에 의해 계선책임이 없는 소규모 중앙정부기구들이 주도하는 국가기구 형태가 발달(→ 분산화된 국가구조의 발전)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16. 정답 ③

해설 ③ 반대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 방식으로 원칙금지/예외허용 체제(positive system)와 원칙허용/예외금지 체제(negative system)가 있다.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와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에서, 전자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는 다른 모든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지만, 후자와 같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게 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17.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③ 자치경찰공무원
- ④ 지방소방공무원

17. 정답 ①

해설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국회의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별정직 공무원이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5).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은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있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18. 정답 ③

해설 ③ 음식물은 종전과 개정전 모두 3만원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종전	개정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1. 음식물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한다.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9. 정답 ③

해설 ③ ㄴ, ㄷ만 올바른 내용이다.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라 고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거친다.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20. 정답 ④

해설 ④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으나 정액분은 지급가능하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